보도자료

배포일 : 2025.1.22.(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 국민소통국 : ☎ 02-2630-0050 □ 담당 : 김재기 과장

국민소통위원회,
전한길 유튜브 영상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구글에 신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허위 조작 감시단)는 오늘(22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 <꽃보단전한길>에 게시된 영상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를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전한길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전자개표 방식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부정한 의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선관위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개표 방식이 조작될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거나 관련 조작이 이루어진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 경찰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한 적이 없음을 밝혔으며,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거 무결성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는 콘텐츠는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은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콘텐츠를 금지하며,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은 사용자를 혼란시키거나 기만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엄격히 금지한다. 전한길 씨의 영상은 이러한 규

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소통위원회는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음에는 채널에 대한 제한 조치 없이 주의가 주어지지만, 90일 이내에 2차 경고를 받을 경우 2주 동안 콘텐츠 게시가 금지된다. 90일 내에 3차 경고가 발생하면 해당 채널은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신고를 통해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유튜브 플랫폼의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파출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약 190여 건의 제보를 접수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 고발 대신 유튜브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허위 정보와 조작된 주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시민들과 협력하여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구글과 유튜브 등 플랫폼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위 정보와 조작된 콘텐츠를 근절하는 데 있어 민주파출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